

2025년 대비 법무사 민사소송법

강의계획서

일정 2025년 5월 7일(수) ~ 5월 23일(금), 13회

교재 FORTUNE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장
+ 적중 사례 자료 + 법무사 법전(각자 지참)

강의시간

오전 9:00 ~ 오후 1:00

강사

김 춘 환

법무사 민사소송법 최선의 선택 !!!

김춘환 민사법을 믿고 따라오시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 강사 소개

1. 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Ph.D, 민사법 전공) 수료

前 月刊 考試界 기획위원

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법, 민사소송법)

前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 과정 강사(민법, 민소법)

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학과 교수), 중앙법학회 이사

現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인천대 법학과, 성신여대 법학과 특강 강사

現 월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전임교수

現 해커스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교수

現 공단기 법원직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

2. 저서

Slim 민사소송법 조문집 제6판(2020), 학연 刊

Fortune 민법 (2021), 학연 刊

Fortune 민법의 종결 (2021), 학연 刊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 전정2판(2021), (주)월비스 刊

Fortune 김춘환 법무사 핵심 암기장(2023, 신간), 학연 刊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12판(2024), 학연 刊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민사법연구소, cafe.daum.net/chunzivilprozess

□ 법무사 2차 민소법의 특징

1. 판례 위주의 출제

현재 시점에서 법무사 민소법 문제의 특징은 중요 判例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출제하면서, 그 판례에 대한 쟁점을 문제로 삼아 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문 1】 [기본적사실관계]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도 甲에게 1억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아래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 (추가된 사실관계)

이 사건 소에서 乙은 소구채권의 부존재 항변 및 상계항변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甲의 소구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위 물품 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乙의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경우 乙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2.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의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상계항변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에서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발령되었다. 이에, 乙은 상계권을 행사하여 집행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甲을 피고로 하여 청구이의의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乙의 주장이 청구이의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10점)

2. 문제의 형식

그리고 문제의 형식으로는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목차를 달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I. 결론

항소의 이익이 있다.

II. 이유

1. 원칙 - 형식적 불복설

상소는 자기에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형식적 불복설).

2. 예외 -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피고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 이유의 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기판력은 주문의 판단에만 생기기 때문에(제216조 1항) 어떠한 이유로 승소하여도 승소의 법률효과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지만,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용하는 판결이 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피고의 경우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이 경우 원고의 소구채권(=수동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유변경이 되어 승소하는 것이 피고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소의 이익이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상계의 항변은 단독행위로 상계권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계정산의 합의는 제외된다.

I. 결론

乙의 주장이 청구이의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II. 이유

1. 기판력의 시적 한계와 형성권의 특수성

기판력의 시적한계(실권효, 차단효)란 기판력은 변론종결시(표준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에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소의 표준시 전(변론종결시 전)에 존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권을 잃는다는 것을 이른다(제208조 1항 5호, 제218조 1항, 민사집행법 제44조 2항). 문제는 상계권·해제권·취소권 등의 형성권도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차단효·실권효가 적용되어야 하는 반면, 이런 형성권들은 실체법 독자적으로 행사기간(민법 제146조)이 정해져 있어 차단효가 적용될 경우 소송법이 실체법상의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가 쟁점이 된다.

2. 표준시 뒤의 형성권의 행사 - 상계권비실권설

학설은 실권설, 비실권설, 상계권비실권설, 절충설 등이 있다. 판례는 취소권, 해제권, 백지보충권의 경우에 그 주장은 변론종결전의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계권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대판 1996.06.28. 66다780).”고 하여 상계권비실권설의 입장이다. 그리고 건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乙)이 임대인(甲)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도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5.12.26. 95다42195).”고 하여 건물매수청구권비실권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비실권설은 무효사유도 차단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며, 실권설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만 상계권의 경우에도 실권된다는 것은 상계권이 소구채권과는 관계없는 즉 본소송과는 관련없는 반대채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으며, 질충설은 원래 공격방어방법은 지·부지와 관계없이 차단된다는 기판력의 사상에 반한다. 따라서 상계권비실권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위 판례 중 밑줄 부분을 중심으로 자신이 이해, 암기한 내용에 대해 답안지에 ‘현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3. 공부 방법

(1) 강사의 강의에 충실

현재는 법무사 문제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 강사분들이 출제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법원행정고시, 사무관승진, 서기보 시험도 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서기보시험에 출제하였던 (객관식) 판례 등을 변형하여, 2차 형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강합니다. 특히 그 출제 판례에 대해서는 서기보시험에서 민사소송법 1위를 하고 있는 김춘환 강사가 누구보다 判例 등을 제일 잘 분석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강의를 잘 따라오면, 법무사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여도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핵심 암기장

다른 2차 시험에서도 상당한 적중도를 보였던 핵심 암기장을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관련 시험 용으로 변형하였습니다. 14년 이상의 세월 동안 사랑 받아온 책이니만큼, 법무사 시험에도 높은 적중도를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 논리전개 내지 논증의 틀(폼)

(1) 이하의 내용은 제 대학원 지도교수님¹⁾의 글이니 민사소송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2)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는 문제에서 1.의의 2.취지, 근거, 법적 성질, 기능 3. 요건 4. 효과 식의 정형적인 폼이 있듯이, 사례문제에서도 그 사례문제의 성질에 따라 몇 가지의 폼을 미리 만들어 두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예:

1. 문제의 분석(문제점의 추출⇒논점의 문제제기, 문제의 소재)
2. 논점 전개
 - (1) 정의, 원칙, 예외(수정), 규범
 - (2) 문제로부터 요건정립, 취지, 논점의 결론, 반대설, 반대설 비판
 - (3) 전제, 이론적 귀결, 부당성 지적, 규범, 허용성, 특수성
3. 사안 적용 - 삼단논법의 귀결
4. 사안 해결 - 물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 긴요

5. 공부 방법상의 유의점

(1) 제도나 논점에 대해 왜(WHY?)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취지 등에 대하여 생각한다.

1) 김○○, P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제43회·제48회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 (2) 유사한 제도나 논점의 상호 비교, 구별 표시 정확하게 이해, 아이덴티티 확립
- (3) 제도나 논점의 골격을 먼저 기억하고 거기에 공부가 더해 감에 따라 살을 붙혀 나감
- (4) KEY WORD 중심의 공부
- (5) 판례 태도 정확하게 기억(우리 판례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 (6)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지 말고(다침!!!)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7) 모든 공부는 결국 시험장에서의 답안작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평소 답안작성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책을 읽어나갈 때에도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하고(효율적인 마킹) 결과물을 간결하게 머리속에 정리해 두고 자주 되새김질을 한다.

회수	일시	중요쟁점
제1회	5/7(수)	1. 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 2. 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辨 34) 3.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 4.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辨 39) 5. 관할 -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勞 10회), 변론관할, 司 34, 50, 55, 勞 11회) 6. 이송결정의 구속력(司 41)
제2회	5/9(금)	7. 당사자 확정[사망자당사자소송(辨 40, 司 50, 54, 法 15, 勞 11회), 법인격부인] 8. 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司 50) 9. 당사자적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司 46,47, 法 13),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司 54), 제3자 소송담당(勞 1)과 채권자대위소송(司 39,41,43,48,53,54)]
제3회	5/10(토)	10. 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辨 44) 11.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司 40) *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 심급대리원칙, 파기환송판결의 성질(司 37, 法 2022 기출) 12.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무권대리인(司 55) 13.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제4회	5/12(월)	14.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司 54) 15.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司 43, 48, 法 14) 16.확인소 확인의 이익- 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法 13) 17.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司 28, 41, 51, 53, 54) *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무변론판결(司 45, 57)
제5회	5/13(화)	18.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辨 46, 司 53), 채권자대위소송(司 43, 54 法 12), 채권자취소소송(法 16) 19.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辨 42) 20.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 21.공개심리주의 - 영업상, 사생활의 비밀(司 53) 22.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 56, 辨 44) 23.채무부존재확인소와 처분권주의(辨 44) 24.처분권주의-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司 45, 49) 25.처분권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辨 41) 26.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인정여부(司 44, 5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司 47, 勞 10회),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여부(司 51, 57), 석명권(勞 11회) 27.지적의무(시사의무)- 석명권과의 관계(司 51)
제6회	5/14(수)	* 적시제출주의, 이의권 *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28.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司 42, 48, 57) 29.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辨 46) 30.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辨 45, 司 56) 31.소송행위의 하자과 그 취소 여부(辨 40, 司 51)

		<p>32.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司 45, 47, 57, 法 13)</p> <p>33.무변론판결(司 45)</p> <p>* 추후보완제도, 송달(司 55)</p> <p>34.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司 54, 56)</p>
제7회	5/15(목)	<p>35.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司 37)</p> <p>36.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司 50, 53), 현저한 사실</p> <p>*유일한 증거(辨 47)</p> <p>37.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司 50, 52, 勞 9), 서면증언의 특례(司 46)</p> <p>*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의 신설</p> <p>38.문서제출명령(司 47)</p> <p>39.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p> <p>* 증거보전(辨 46)</p>
제8회	5/16(금)	<p>40.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p> <p>41. 자유심증주의(勞 1)-증명방해(입증방해)의 문제</p> <p>42.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司 45)</p> <p>43.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멸(辨 39)</p> <p>44.소송종료선언(司 43)</p> <p>45.채소금지- 당사자동일((司 48), 소송물 동일의 문제</p> <p>46.채소금지-소의 교환적 변경과의 관계(司 52)</p> <p>47.소송상 화해의 효력-기관력의 제한적 인정여부(司 39)</p> <p>48.화해권고결정</p>
제9회	5/19(월)	<p>* 판결의 의의 및 종류, 기속력(판결의 경정), 형식적 확정력</p> <p>49.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司 49, 勞 10회)</p> <p>50.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관력의 시적한계(司 43, 49)</p> <p>51.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관력의 표준시</p> <p>52.기관력의 작용-선결관계(司 52)와 모순관계</p> <p>53.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辨 43, 司 52)</p> <p>5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辨 39)</p> <p>55.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辨 38, 司 56)</p> <p>56.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p> <p>57.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p> <p>58.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제책(司 40, 55)</p> <p>59.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제책과 실체법상 구제책(司 40)</p> <p>* 가집행선고, 소송비용</p>
제10회	5/20(화)	<p>60.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辨 43)</p> <p>* 선택적 병합 - 판결이유가 다른 경우의 항소심법원의 판단(辨 46)</p> <p>61.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辨 46)</p> <p>62.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司 46, 辨 46)</p> <p>* 예비적 병합과 불이익변경의 원칙(司 51회)</p> <p>63.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p> <p>64.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p> <p>65.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p> <p>66.중간확인 의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p> <p>67.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司 46)</p>

		68.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흠결시의 조치
제11회	5/21(수)	69.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증가공통, 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司 38, 45, 47, 53, 56, 勞 1) 70.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司 38, 45, 47, 52, 57, 勞 11회) 71.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司 46, 49, 53, 55) 72.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司 49, 57) 73.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74.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된 선정의 인정여부 75.선정당사자-선정 후의 선정자의 지위
제12회	5/22(목)	76.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辨 45) 77.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78.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司 50) * 공동소송참가(勞 10회)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司 48) 79.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司 51, 勞 9) 80.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 81.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 82.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司 50) 83.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司 51) * 소송승계(당연승계, 특정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 司 56)
제13회	5/23(금)	84.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 85.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 86.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司 44) 87.상소불가분의 원칙(司 51, 57) 88.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司 51) 89.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司 51) 9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司 51) 91.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 55) *특별항고(法 11) 92.재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93.재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 94. 간이소송절차(소액사건, 독촉절차) 95. 공시최고절차